

韓·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 :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이 강 경*

요 약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韓·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韓·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韓·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Strategy for South Korea–Vietnamese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Lee Kang Kyong*

ABSTRACT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been engaged in extensiv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In March 2018,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made an official visit to Vietnam, a key partner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discussed comprehensive cooperation measures, including expanding trade volume and measures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e two countries signed a joint defense and defense cooperation statement, which include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defense cooperation, UN PKO activities, excavation of remains, and joint military cooperation. Currently, Vietnam is fac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is stepping up military modernization and military buildup to counter this. In particular, Vietnam is strengthening its external military cooperation beyond ideology with the U.S., Russia, India and France to strengthen its maritime power. Against this backdrop,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needs to expand beyond the tradition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o military cooperation.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on the 26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and seek ways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Vietnam, which has grown to the next China. To that end, it analyzed Vietnam's security environment and military strategy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promoting military cooperation focusing on defense areas.

Key Words : New Southern Policy, Military cooperation, Economic interdependence, Package type export of Defense

접수일(2018년 8월 14일), 수정일(1차: 2018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29일)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1. 서 론

동북아 지역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 다자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안보영역에서는 지역 패권경쟁, 역사·영토분쟁과 같은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냉전 질서를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폭넓은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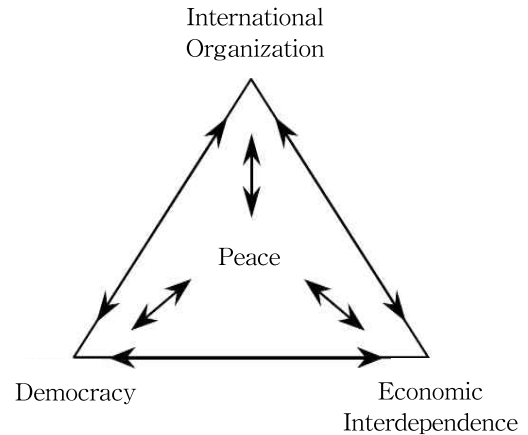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간 교역 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韓·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고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지원 등 국방 및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일제 식민 지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역사적 공감대 위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같은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동안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발전 범위를 군사협력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이한 韓·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 속에서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2.1 군사협력 관련 이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6)』에서 항구평화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약속강식의 국제관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6가지 예비조항과 3가지 확정조항, 2가지의 추가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중 영구평화의 보장에 관한 제1추가조항에서 평화의 식을 촉진시키고 전쟁위기를 중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상업적 정신(Commercial spirit)’을 제시했다. 칸트는 국가 권력의 가용수단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금력이고, 상호이익은 여러 민족을 통합시키며 전쟁을 중재한다고 강조했다.[1] 브루스 러셋(Bruce Russett)과 존 오닐(John Oneal)은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론을 기초로 (그림 1)과 같이 ‘평화의 삼각축’ 개념을 제시했다.[2]



(그림 1) 평화의 삼각축 (The Kantian Triangle)

러셋과 오닐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고,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국가간 분쟁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했다.[3]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를 발전시켜왔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집단안보체제와 공동안보체제, 협력안보체제 등이 있다.[4] 이 중에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국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안보위협과 불안을 제거하는 다자적 안보협력을 의미한다. 협력안보의 특징은 상대국의 안보이익과 군사력의 실체를 인정한 가운데 상호공존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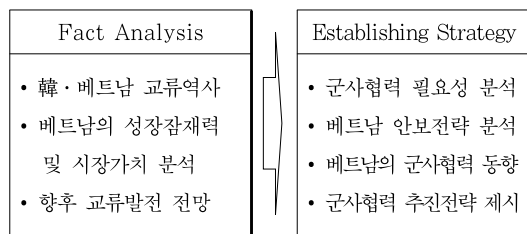
또한 동맹(Alliance)은 양국간 혹은 다수의 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해 맺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합의이다.[6] 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위협의 공동 대응, 세력균형을 통한 패권안정, 전쟁에서의 승리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군사협력은 국가간 공동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군사활동으로 앞서 살펴본 경제적 상호의존론과 다자안보협력, 동맹의 개념과 이론적 연계성을 갖는다.

2.2 선행연구 및 분석틀

군사협력은 군사외교의 한 분야로서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복수국가간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보정책 공조, 군사정보 교환, 방산협력,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다.[7]

韓 · 베트남 양국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베트남전쟁과 통합과정, 개혁 · 개방, 다문화 지원사업 등 주로 역사 · 경제 · 문화적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연구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韓 · 베트남을 포함하여 ASEAN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남 · 북한 관계 발전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특히 베트남의 개혁 · 개방 관련 연구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경제발전 적용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韓 · 베트남의 군사협력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표 1> 韓 · 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의 분석틀



3. 韓 · 베트남 교류 역사와 전망

3.1 韓 · 베트남 관계의 특수성

1992년 수교 이후 베트남은 한국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6년 동안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28배로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은 2017년 기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이 되었다.[8] 한국의 세계 교역액 규모가 2015~201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반면, 韓 · 베트남 교역액은 FTA 발효 이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9]

韓 · 베트남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국간에 역사 · 문화적 공통성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두 나라는 중국대륙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일제 식민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다. 특히 이념적 대립으로 분단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동족간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베트남은 적화통일이 되었고 남북한은 아직까지 분단상황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통일과정과 통합 이후 개혁 · 개방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경제건설 모델로서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3.2 韓 · 베트남 교류협력의 역사

한국은 1956년 5월 남베트남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베트남전쟁시에는 1964년 3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참전하였다. 베트남전 파병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

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전투부대를 파병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국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건설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발생과 라이파이한[10] 등의 문제는 향후 韓·베트남 관계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판단된다.

1975년 베트남전쟁 종전 후 한국은 대사관을 철수했고 한 동안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1986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정부·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재개되었다. 양국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교류에 합의하였고 1992년 연락대표부를 설치하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국교정상화 이후 韓·베트남 관계는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탈이념과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발전해왔다.[11] 특히 양국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3.3 베트남의 성장잠재력과 시장가치

베트남 정부는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을 채택하여 기존의 중앙계획적 경제구조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유치와 수출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추진하였고 2020년까지 약 6%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2] 베트남이 단기간에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높은 성장잠재력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외세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역사 속에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을 치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15~30세의 젊은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한편 베트남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약 9천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의 시장구매력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 한국 기업들의 사업진출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4 향후 韓·베트남의 교류발전 전망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경제적으로는 신남방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동아시아 균형외교의 핵심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방·방산분야의 호혜적 협력증진을 위해 체결한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은 향후 韓·베트남의 교류협력 및 관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ASEAN 국가들과의 국방·안보분야 협력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의 특성상 매우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방산분야의 군사협력이 확대된다면 향후 韓·베트남 관계발전을 넘어 다자안보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방산분야 군사협력 추진전략

4.1 韓·베트남 군사협력의 필요성

양국간 군사협력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합의사항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ASEAN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고, 베트남도 현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韓 · 베트남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에 대한 주요는 상당부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 韓 · 베트남의 군사협력 관련 합의사항

구 분	주요 국방분야 합의사항
2001년	·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0년	·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4년	· 군사비밀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2015년	· 상호군수지원 양해각서(MOU) 체결 · PKO 교류협력 약정
2018년	·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 채택

* 출처: 외교부, 『베트남 개황』 (2018), pp.143-144.; 국방부 보도자료(2015.5.21.)

韓 · 베트남의 실질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北-베트남 관계는 사실상 우호적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우방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같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국가들을 한국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것은 다자안보협력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양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韓 · 베트남은 향후 전략적 안보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남아 최대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베트남은 한국에게 중요한 방산수출 시장이다. 2017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군사력은 현역 49만 명과 예비군 300만 명을 운용중이며 지상군 위주의 통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13] 현재 해군은 5개 해역사령부와 해병대, 해군비행단과 해양경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고 공군은 3개 비행사단과 6개 방공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공군은 대부분 러시아산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4.2 베트남의 안보전략 분석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보적 요인이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對중국 관계에서 협력과 대립의 이중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한 중·러 관계 개선,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 해양자원 확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되었다.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영유권 분쟁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교통로이며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중국은 2012년 해양권익을 ‘핵심이익(Core Interests)’의 개념에 포함시켰고 2016년에는 남중국해를 추가로 반영했다.[14]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강대국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통해 세력균형을 취하는, 이른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표방하고 있다.[15] 이러한 안보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베트남 방문 시 ‘살상용 물자의 對베트남 판매금지’를 해제하고

향후 베트남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16]

베트남은 『2009년 국방백서』를 통해 해상주권 보호와 군 현대화 추진계획을 밝혔다.[17]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형의 9단선(Nine-dashed line)을 설정하고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를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속에서 ASEAN 연안국들은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과 한국의 방산능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교두보인 베트남과의 방산분야 군사협력 강화는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3 韓·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

4.3.1. 베트남의 군사협력 동향

韓·베트남 양국간에 현재 진행중인 군사협력 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제4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18]에서 체결된 ‘UN PKO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베트남 PKO 센터 출범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파견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4년 韓·베트남의 정상간 합의에 따라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지뢰와 불발탄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는 국토면적의 약 20%의 지역에 지뢰와 불발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 지뢰·불발탄 제거 계획 2010~2025’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지뢰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9]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위해 2015년 양국간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다각적인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0]

베트남의 대외 군사협력 동향을 살펴보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를 비롯하여 과거 적대국이었던 프랑스, 미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무기거래 통계자료에(SIPRI Arms Transfer Database)에 따르면, 베트남은 '12~'16년 기준 무기수입 세계 11위를 기록했으며 향후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韓·베트남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와 경제적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산분야 군사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3.2. 방산분야 군사협력 추진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 확보를 위해 대외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무기체계의 구매 수요가 높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韓·베트남 군사협력은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방산분야 군사협력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구분	단 계 별 추 진 전 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연 및 방산업체 견학, 방산전시회 참관 ○ 베트남군 무기체계 유지보수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개량, 정비, 종합군수지원 등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거래(GtoG) 제도를 통한 무기체계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벤치마킹 ○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방산수출 추진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생산·전문 기술정보 교류 ○ 방산 패키지 개발 및 수출

그 동안 對베트남 방산수출은 주로 군용차량과 화생방물자 등 전력지원체계 위주였으나 향후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체계 수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된 방산수출의 판로를 모색하고 정부간 거래(GtoG)를 활성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최근 방산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ODA를 통해 평화와 안정유지를 명분으로 5억 달러 상당의 해안경비정 6척을 베트남에 수출한 바 있다.[21]

지난 2007~2008년 페루, 콜롬비아와 탄약, 기동장비 계약시 방산물자 획득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구매를 위해 ‘정부간 거래(GtoG)’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국정부는 2009년 ‘방산물자 등의 정부간 거래(GtoG)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22] 이를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하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가 신설되었고 201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으로 정부간 거래제도[23]를 통한 수출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방산수출의 정부간 거래제도는 국내 방산기업을 대신하여 정부가 구매대상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간 거래방식’은 후속군수지원과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를 보장하여 구매국들이 선호하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수출과 방위산업 육성 및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미국이 제도화한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방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단일 무기체계의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방산 패키지’ 방식의 수출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방산 패키지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외에도 관련 교리·편성·교육훈련 등의 전력화지원요소와 안보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망라하는 수요자 중심의 방산수출 개념이다.[24] 이상과 같이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韓 · 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은 향후 ASEAN 국가들과의 다자안보협력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 결 론

2018년 3월에 개최된 韓 ·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간의 관계를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로서 베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의 신드롬과 한류(Korean wave) 열풍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개선된 분위기 속에서 양국관계는 수교이후 최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편승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세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체계 수입을 통한 군비증강 및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韓 · 베트남의 역사적 특수성과 그 동안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양국관계 발전 및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K계열 무기체계와 T-50 훈련기, 탄약 등 방산수출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성장동력으로도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韓 · 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은 기존의 인사이교류에 국한된 제한적 협력에서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 · 장기적으로 정부간 거래(GtoG) 및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방산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방산패키지 개발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방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韓 · 베트남의 군사협력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넘어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Immanuel Kant, ‘하나의 철학적 기획, 영구평화론,’ 이한구 옮김, 서광사, p.56, 2008.

[2] Russett, Bruce and Oneal, John,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W.Norton & Company, 2001.

[3] Oneal, John R, Russet, Bruce and Barbaum, Michael L. “Causes of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5-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3, 2003.

[4] R.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p.357, 1982.

[5] 신범식,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p.16, 2010.

[6]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p.82, 1987.

[7] 황진환 외, ‘新국가안보론,’ 박영사, p.210, 2014.

[8] 외교부, 『베트남 개황』, p.144, 2018.

[9]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Global Market Report*, 17-049, p.7, 2017.12.20.

[10] 라이다이한(Lai Daihan)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11]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7권, p.277, 2013.

[12] 강영문,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한-베트남 통상 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p.101, 2017.4.

[13] 외교부, 『베트남 개황』, pp.75-76, 2018.3.

[14]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제적인 이슈,” *중소연구*, 제41권, 제1호, p.51, 2017.

[15] 김석수,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제4호, pp.1-2, 2016.

[16] CNN Politics, “Obama lifts U.S. arms ban on Vietnam,” 2016.5.24.
<https://edition.cnn.com/2016/05/23/politics/obama>

-vietnam-trip/index.html(검색일: 2018.5.25.일)

[17] 베트남 국방부, ‘VIETNAM NATIONAL DEFENCE 2009,’ 2009.12.

[18] 한-베트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한 단계 격상한 회의체로서 2012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

[19] 경향신문, “국방부, 베트남에 지뢰제거 기술 전수,” 2015.1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31501531&code=910303 (검색일: 2018.5.26.)

[20] 국방부 보도자료, “유해발굴사업, 축적된 노하우로 군사외교 및 국제협력활동 강화,” 2017.9.14.

[21] 안영수 · 김미정,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p.141, 2017.12.

[22]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방산물자 등의 GtoG 수출시 정부의 역할 및 보증에 관한 연구,” pp.4-10, 2014.1.

[23] 정부간 거래(GtoG : Government to Government Sales) 제도 :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 정부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방산물자, 원유 등 장기간 또는 대량 거래 계약에 주로 이용된다.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서, p.4.

[24] 박원재 등, “방산패키지 수출 극대화 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1권, 제3호, p.67, 2014.9.

— [저 자 소 개] —



이 강 경 (Kang-Kyong Lee)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7년 2월 고려대학교 석사
 現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합동참모대학 학생장교
 email : Kangkyonglee@hanmail.net